

준공 후 미분양 등록임대 허용하고 매입시 우대금리 적용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건설사 '책임 준공' 완화 검토 유동성 공급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감면...SOC 예산 조기 집행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건 쌓여가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로인한 건설경기 악화가 국내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이는 국내 GDP가 0.4%포인트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됐다. 건설업의 경우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일만할 정도의 중견 건설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반동의 여지가 없는 지방 건설경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보겠다는 건데 단순 미분양 매입이 지역 건설경기 상승에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과 함께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

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간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법,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 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

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규모를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000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전산센터 전북은행과 통합...전주에 구축

광주은행 노조 "직원 90% 이전 반대" 성명...진통 클 듯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각각 운영하던 전산센터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으로 통합한다.

이는 지난 2022~2023년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양 은행 전산센터 운영 취약점에 대한 개선안 요구에 따른 조치이지만, 광주은행 노조는 90% 이상의 직원들이 광주은행 전산센터를 전북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각 은행의 전산센터를 더해 공동전산센터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동전산센터는 지난달 양 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그룹의 내부 논의 및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단의 후보지 분석 결과 광주 첨단3지구 내 AI 융복합지구와 전주 탄소소재산업단지 중 전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공동전산센터 통합은 지난 2022~2023년 금감원의 종합감사 결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모

두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이전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권고받고, 각 은행의 전산센터 운영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진단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양 은행은 산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전산센터 개념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중형 규모의 공동전산센터 신축' 전략을 수립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새로운 공동전산센터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67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양 은행이 공동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전산센터는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공동전산센터에는 전산 관리직 3명, 협력업체 직원 7명 등의 인원을 전주 공동전산센터로 배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IT투자 사업, 지역 인재 채용, 지역업체와의 협력 관계

유지 등 광주·전남 지역과 연계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은행 90% 이상의 직원들이 광주은행 전산센터 전북이전 반대에 서명을 했다"며 전산센터 전주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의 자금이 타지로 역외유출되고, 광주은행 IT직원의 고용 안정성 등도 불안정해진다는 점에서다.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을 단지 캐쉬카우로만 인식하고, 최근 5년간 5763억원의 과도한 현금 배당을 통해 적극적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난 2024년 10월 전북은행의 중자를 위해 광주은행이 1500억원을 한남한 현금 배당은 단지 광주은행을 하나의 착취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산센터 통합 운영 시 최소 8명의 인원이 전북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근무인원이 늘어날지 모른다"며 "IT직원 고용 안정성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업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등 간편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이 임대주택계약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데 따른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이 등록을 통해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명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 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등에서 관련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들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농관원에 방문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임대주택 농업인들의 불편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농지은행 임대주택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세관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24일부터 접수 시작

광주본부세관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24일부터 3월7일까지 관세청 FTA포털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

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삼성전자 모니터 판매량 10대중 8대는 무빙스타일 1년만에 판매 5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판매량의 80%는 '무빙스타일'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무빙스타일 제품은 작년 4분기 기준 전년 동기와 비교해 판매 비중이 약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무빙스타일은 별도 기기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니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스탠드를 결합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무빙스타일의 인기 요인으로 편리한 이동성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조합해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무빙스타일은 4K 해상도의 M8·M7·M1부터 FHD 해상도의 M5까지 4개 라인업을 갖췄다. 또 43·32·27형 등 다양한 화면 크기로 제품을 조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무빙스타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취향과 사용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6년만에 최소...20대 역대 최대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채용 한파 지속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한파로 인한 건설업의 위축 등을 비롯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대 이하와 40대 임금 일자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 8000개로 전년 대비 24만 6000개 증가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은 3분기 기준 지난 2018년 3분기(21만 3000개) 이후 6년만에 가장 적다.

특히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 2022년 3분기(59만 7000개), 2023년 3분기(34만 6000개)에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4만 6000개 줄었고, 40대는 6만 7000개 감소했다. 20대 이하와 40대 모두 임금근로 일자리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밖에 60대 이상(27만 4000개)과 50대(11만 9000개), 30대(6만 6000개)는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분류별로는 보건·사회복지가 13만 8000개 늘어 일자리 증가폭이 가장 컸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3만 2000개), 운수·창고업(3만 1000개) 등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건설업(-4만 7000개), 부동산업(-8000개) 등은 감소했다.

일자리 점유를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지속한 일자리는 1495만 9000개로 전체의 72.0%에 달했다.

퇴직 및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5만 4000개(16.1%), 신규 일자리는 247만 5000개(11.9%)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71.52 (+44.71)
↑ 코스닥	778.27 (+4.62)
↓ 금리(국고채 3년)	2.630 (-0.011)
↓ 환율(USD)	1438.35 (-5.35)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

정원주(사진) 대우건설 회장이 19일 한국건설경영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이날 개최한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대표 만장일치로 정원주 회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협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정원주 회장은 "우리 건설산업이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만큼 건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건설 시장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출범한 단체로, 국내 26개 대형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얼굴

"공공조달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힘 쏟겠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달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7대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사진)이 19일 공식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다만 직원들에게 밝힌 취임사에서 "유능한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대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며 "올해는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빛'과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의 '시즌 2'로서, 민생조달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든든한 벗으로, 공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상생한다는 마음을 갖고 조달청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조달공무원의 기본 덕목인 전문성, 공정성(청렴), 친절 마인드 등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조달청에서 국방조달지원과장, 정보기술계약과장, 건설환경구매과장, 우수제품구매과장 등을 거친 조달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